

[정책 1]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여성의당		
제 목	여성혐오범죄 근절! 성범죄자는 잘리는 나라	분	야* 안전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중요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여 2차가해, 보복범죄의 위험을 줄이고 처벌 실효성 확보 - 디지털 성범죄 삭제 대상 범위 전면 확대하여 피해자 신상 노출 등 2차 가해 방지, 유포 방지 도모 - 미성년자 성범죄 근절 및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p>○ 이행방법</p> <p>① ‘여성혐오 동기’ 폭력 범죄가 포함 되도록 여성폭력 범위 확대 및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중요범죄는 과급력과 모방범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 폭력 범죄보다 중하게 다뤄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동기가 양형상 가중요소로 고려되지 않고 심신미약 등 감형 요소로 고려되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한 법제 개선 - 여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신설 - 여성폭력방지법에 여성폭력 형량 1/2 가중 처벌 규정 신설 - 양형 가중 사유로 “가해자가 여성에 대한 특정한 편견을 가져 여성만을 범죄 표적으로 삼는 등 여성혐오적 범행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를 포함 <p>②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청구 의무화: 10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총 96건에 불과함.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약물치료의 청구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비활성화의 주 원인이므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치료 청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배달기사, 헬스트레이너, 장애인 재활치료사와 같이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수반되는 직업군의 경우 성범죄 이력 조회 의무화, 이력 있을 			

시 자격 제한

- ‘성전’ 카페 폐쇄 조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존 사법계의 통념과 편견을 적극 활용하여 2차 가해를 성범죄 방어 전략으로 삼는 등 폐해가 극심함

③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에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④ 디지털 성범죄 2차 가해 및 유포 방지

- 성착취물을 유인, 광고, 알선, 소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 대상 정보에 포함.
- 피해자의 주소·성명·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내용의 정보를 삭제 대상 정보에 포함

⑤ 미성년자 성범죄 근절 및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빈발하므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범죄 이력 전수 실태조사 및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미성년 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학내 징계위원회 개최 및 퇴학 처분 의무화하고 학교기관의 장이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하여 책임 강화
- 미성년 간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및 처벌 실효성 확보
- 학교 내 성폭력 성희롱·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 오픈채팅을 통한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담 인력, 예산 확보하고 범죄 연루된 계정 영구정지 의무화

○ 이행 기간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피해 당사자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

국가 R&D 지원사업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포함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여성의당		
제 목	임금차별, 채용차별, 승진차별 3대 차별 철폐! 여자 못 거르는 나라	분	야* 노동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즘 사상검증 철폐 - 채용 과정, 교육 기회,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방안 마련 - 성별 임금 공시제도의 대상 및 내용 범위 확대 - 근로시간 단축, 모두를 위한 휴직 제도 마련 - 산업재해 수급 요건 재정비 <p>○ 이행방법</p> <p>①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 및 고용노동부 내 차별시정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및 채용과정에서 여남 성비, 면접자와 채용합격자의 여남성비 공개 - 면접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남동수의 심사위원 배정 - 채용성차별 피해자에게 손해 규모의 5배 이상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기능 확대 -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발생시 기업 페미니즘 사상검증시 기업 패널티 부과 <p>② 성별 임금공개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임금 공개 의무화, 임금 산정기준 및 임금체계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 - 성평등 공시 내용 확대. 직원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구성항목별 여남 직원 임금, 직종별 임금, 고용형태별 임금, 여남 평균 근속 연수, 여남 고용형태별 직원 수, 여남 직급별 인원수, 여남 신입교원채용자 수, 여남 퇴직자 수, 여남 육아휴직자 수를 공시 내용에 포함 - 여남별 고용 성비와 임금 격차, 사상검증 피해사례, 여성 임원 비율 등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의무화 <p>③ 고용성차별 및 불이익처우에 따른 구제절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위원회 내 여성공익위원 비율 확대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와 연계하여 고용노동부 내 성차별 시정 기능 확대 -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예산 확대 			

④ 근로시간 단축, 모두를 위한 휴직제도 마련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35시간으로 단축
- 과로사 방지, 쉼 권리 보장을 위해 3년 이상 근속시 자기개발과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모두를 위한 휴직 제도마련

⑤ 사용자 처벌 강화

-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주에게 임금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성차별적 고용 관행, 성적 괴롭힘 관행 기업주에 대한 처벌 및 법적 제재 강화
- 임금 공시제도와 정부의 노동 통계 조사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책임사업주를 직접 처벌하거나 임금총액의 1%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 고용 성차별 처벌 조항에 실행 포함하여 형량 강화

⑥ 산업재해 적용 대상 확장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여성 질환 및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적 괴롭힘 등을 재해 유형으로 포괄·확대
- 근로복지공단의 급식 노동자, 여성 대리기사, 여성 콜센터 직원, 교직원 등 여초업계에서의 산업재해 판정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완화

○ 이행 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 조달 방법

- 고용노동부 예산 확대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여성의당		
제 목	여성 1인 가구도 내집 마련! 여자도 사람답게 사는 나라	분	야* 건설교통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1인 가구의 안정된 주거권 보장 -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들을 위해, 신혼부부와 유자녀 중심 청약 가산점 제도의 불평등 개선 -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및 주거 정책 강화로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 - 주거지 속 여성들의 범죄 노출 위험과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주택 안전 제도 강화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열악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 놓여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여성 1인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 및 주택대출 제도 정비 <p>○ 이행방법</p> <p>①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첫 전월세 계약 시 중개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안심중개인제도 실시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공동주택 신설, 공급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금융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 여성 1인 가구 하자수리 우선지급제도 실시 - 여성 1인 가구 세입자의 하자보수, 주택 수리비용 청구권리 강화를 위함 - 주거 감독관 제도 시행을 통해 주택의 안전 상태 감독,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 상황 시 갈등 조정, 세입자 보호 -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지 안전 보장을 위해 여성 안심 주거 시설 확대, 주택가 안전 사각지대 조사 및 안전 시설 강화 <p>② 주택청약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제도의 부양가족 가산점, 무주택기간 산정 및 생애 최초 구입자 특별 공급 자격 요건에서 결혼 여부, 자녀 수 항목을 삭제하여 1인 가구에게 불리한 주택 정책 개선 - 전세 및 담보 대출의 신혼부부 혜택을 줄이고, 청년 1인 가구 혜택에 추가 			

- 청년전세자금 대출 연령을 39세로 통일하여 비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

③ 주거 복지 패러다임 전환

- 여성 비혼 공동체/지역 공동체 지원 제도 신설 및 여성 1인 가구에 여성 자립 지원금 제공

- LH 전세자금대출시 공동임차인의 공동 전세대출 허용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 지자체 별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공급 의무화

④ 차별 없는 주거권 보장

- 동거가족 및 생활공동체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주택자금 대출 등에 있어 현행 '법적 가족'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주택 건설 및 배분 등 정책에 다양한 주거생활 양식의 요구 반영

- 여성 이주민/여성 장애인 주거 시설 관리 감독 및 금전적 지원 제도 신설

-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전세·집 담보 대출 보장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취약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 역시 기존 주거안정정책과 연계해 진행 가능. 취약계층 여성 관련 지원기관들이 주거 및 제적 자립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시행 가능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및 고령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시행사업에 성별관점을 도입하여 예산배분방식 변경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형태로 추진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여성의당		
제 목	악성 여혐 유튜버 수익 몰수! 여성혐오로 돈 못 버는 나라	분 야*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관광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현실의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묘사를 제재하여 인식개선 - 문화예술계의 성차별적 고용과 제작환경을 개선하여 여성 문화예술인의 업계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내 여성혐오를 개선하고 콘텐츠 다양성 확보 - 여성혐오를 규제하는 관계부처 등의 구성원의 여남 동수를 확보하여 심의 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반영 -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의 여성폭력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책 마련 - 여성혐오 미디어의 수익화를 근절하여 성평등한 콘텐츠 제작 및 소비 문화를 조성 <p>○ 이행방법</p> <p>① 정부 부처, 관련 공기업 등 심의 및 제재 기관 동수 고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사 등 이사 임명시 ‘양성평등기본법’의 기준을 맞춰 성별 불균형 해소 <p>② 성평등 모니터링 기구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여성혐오,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감시, 대응 근거 규정 마련 - 기업 자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해당 사안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투명성 보고서의 필수 항목으로 지정 - 여성혐오적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창출 정지 및 수익 몰수 방안 근거 제도 마련 - 마녀사냥, 신상공개,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공격과 성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 창출 제한, 악성 유튜버 형사처벌 강화 			

③ 미디어차별시정위원회 설치

- 방송사 내 고용실태보고서, 고용차별시정계획서 제출 의무화
- 비정규직까지 폭 넓게 감시하여 프리랜서 등이 많은 문화예술계의 사각지대 보완

- 성차별, 여성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시정계획을 담은 보고서 제출
- 이행기준 미달 시 방송 제재 조치를 통해 임금 및 고용 차별과 여성혐오적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④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제작

- 여성 혐오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방송 뉴스 및 신문 기사 등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 금지,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기준안 마련

⑤ 성폭력, 성매매 사범에 대한 출연 금지 법제화 및 재정 지원 금지

-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 제35조 의무조항화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성폭력, 성매매 사범의 5년 이상 출연 금지 조항 추가

⑥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자 범위 확대

- 유튜브개인채널도 선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강화

○ 이행기간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여성의당		
제 목	가족 중심의 여성이 아닌 여성 중심의 가족으로	분	야* 사법윤리, 기타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나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근거 마련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성애 결혼 제도 중심으로 꾸려진 가족 단위로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설계,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제도 마련 시급함 - 결혼제도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제도 시정 결혼제도와 관련해 ‘부성 우선주의’ 등 성차별적인 관행들이 일부 시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자리 잡고 있고 결혼, 장례, 상속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경험하고 있음 - 상속, 장례 절차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 불평등 관행 개선 장례 절차에서 직계 혈연가족이 1순위 연고자로 취급되므로 법률혼과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를 치를 경우 고인의 의사나 권리 보호에 차질이 생김 - 반려동물 보험제도 재정비 및 강화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 보험 적용 질환의 세부적 정보 미흡 <p>○ 이행방법</p> <p>①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및 생활동반자법 도입하여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 - 인적공제와 같은 세금공제,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에서의 불평등 시정, 가족의 부양 및 돌봄 의무를 기본으로 가정하는 기존의 복지정책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입법 활동 추진 <p>②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으로 부성우선주의원칙 폐지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려면 반드시 혼인신고 시 별도 표기하도록 제한하는 현행제도를 정비하여 아빠성 우선주의 철폐하여 엄마성 따를 수 있는 권리 온</p>			

전히 보장

③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이혼소송 법률지원, 절차 간소화 제도 마련

④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 마련

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양육비 지원 자격/절차 간소화

⑥ 가정폭력피해 여성노숙인의 재활, 자활관련 민간 위탁 시설 지원 확대

⑦ 직계 혈연가족을 1순위 연고자로 삼는 법령을 개정하여 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혹은 동거인도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⑧ 동물의료보험 적용 질환 확대 및 세부적 시스템 구축

○ 이행 기간

- 2025년 내 입법

○ 재원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여성의당		
제 목	딸들도 안심하고 학교 다니는 나라	분 야*	교육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성폭력 전문 상담소 운영 - 학교 내 체계적 성교육 실천 및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 - 성착취 산업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 - 대표적 여초 직군, 교사가 돌봄 노동 대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p>○ 이행방법</p> <p>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교내 성폭력 전담 상담소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정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초빙한 전문인력 및 학교 전담 경찰관(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6)으로 성폭력 전담 상담소를 구성 - 보건교사, 학생생활부, 담임 교사, 위클래스로 분산된 성교육 인력 구조 개선으로 교내 성폭력에 일관적 체계적 대응 -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관리자) 간 심각한 성범죄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닌 성폭력 전담 상담소에서 접수를 받아 수사기관에 신고 - 모든 교직원에게 성폭력 신고 의무 강조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p>② 학교 성평등을 위한 성교육 운영 조례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적 학생 인권 침해 행위 명시 및 금지 - 성교육 체계화를 위한 학교급별 필수 성교육 내용 (초등학교: 성별 신체 특성, 몸 긍정주의, 성범죄. 중고등학교: 성범죄, 성병, 피임, 관계, 성적 자기결정권) 조례화 -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2차 가해 예방 내용 조례화 - 전문인력이 성교육을 담당하여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치중된 성교육에서 십대 학생들에 필요한 교제 관계 내 성폭력, 여성 신체 특성과 생애주기, 여성 질환, 성병, 피임, 스텔싱 범죄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현실적 성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 - 학생 보호자 성교육 책무성 강화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 학부모 성교육 프로그램(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도입 <p>③ 학교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p>			

- 신고의무자 가중 처벌을 명시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교원에 미적용한 사례 다수,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처벌 강화
- 소년법 32조 개정, 성범죄 이력 있는 자 교원 될 수 없도록 교직 자격 강화
- 교원평가 폐지로 여교사 대상 익명성을 악용한 성희롱 방지
- ④ 학교 밖 성폭력, 성착취 산업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 적극 보호 조치
 - 아동 및 청소년에 유해한 성착취적 인터넷 환경 변화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학생의 상담 및 지원 확대
 - 가출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여부 의무 조사, 가정폭력 정황이 드러날 시 분리 의무화 하여 쉼터 및 기타 보호기관에 연계
 - 학교 '절대보호구역' 50m 내 유해업소 운영 금지에서 기준을 300m 이내로 상향 및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실태조사 실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개인교습소 근처(200m 이내)에 열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 ⑤ 돌봄 노동을 아동·청소년 보호자 및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행
 - 교육부 내 보육과 돌봄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이전
 - 학교폭력법 제2조(정의)에서 학교 내외가 아닌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폭력만을 의미하도록 학교폭력의 의미를 재정의
 -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평교사 완전 배제
 - 담임교사 한 명당 학생 수 15명 이하로 감축
 - 학교에서 분리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
 - 돌봄노동과 맞닿은 교육 인력의 노동권 적극 보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범위 보장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보건복지부 주도 실패한 저출산 정책을 폐지, 돌봄기관 확대 예산 증액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여성의당		
제 목	유사 성매매 산업 박멸! 여자 파는 전단지 없는 나라	분	야* 여성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성매매 광고 근절, 유흥가 불법 광고전단 처벌 근거 마련 <p>성매매 행위는 불법임에도 남성문화, 접대문화의 일부로 자리하여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성매매업소의 난립을 막지 못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얼돌 등 유사 성매매 영업 제한 <p>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고 성적인 도구로 유통하여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리얼돌 수입 허용 이후 리얼돌 체험방 등 유통, 소비를 조장하는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어 무분별하게 양산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청소년, 장애 여성 등 여성폭력에 있어 더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p>○ 이행방법</p> <p>①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현실화 - 성성매매 알선 차단 및 성산업 축소를 위한 법 집행력 보강, 전담 수사기관 신설, 처벌 규정 강화 및 알선 고리 차단 - 성매매 관련 수사 전담체계 구성 제재 강화, 성착취 피해 외국인 여성 지원 대책 마련 <p>② 유사성매매 광고 처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성착취 상업 광고 전면 금지, 유흥가 불법 광고 전단 수사 및 검거에 대한 지자체 의무 강화 - 지자체 별 집중단속구역 지정 후 자체 단속 점검 실시, 집중 단속 기간 지정 - 각 지역에서 배포된 전단지 수거 의무 지정 - 불법 광고물 감시, 근절을 위한 민간점검활동 지원 - 온라인 성매매 광고, 채팅앱 수사 단속 인력 강화 <p>③ 리얼돌 수입·판매·운송·체험방 영업 규제</p>			

- 여성의 신체를 일부 묘사한 리얼돌 수입 전면 금지화
- 아동 형상 인형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④ 성매매 관련 수사 전담 체계 구성 제재 강화, 성착취 피해 외국인 여성 지원 대책 마련

- E-6 비자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 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 강화. E-6 비자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강구

-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자격 보장 및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임금체불 업주 및 알선 브로커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 및 입증책임 전환

○ 이행방법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하지 않음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여성의당		
제 목	여남동수제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분 야*	정치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이 여성주의/페미니즘 관점에 기초해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헌법을 성평등한 방향과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와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를 헌법에 명시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써 선출직 선거에서 여남동수제를 헌법에 명시 -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정치인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방지책 마련 -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소수 정당과 원외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는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 - 기성정당에 극히 유리한 정당 보조금 배분 기준을 개혁하여 소수정당 지원 확대 <p>○ 이행방법</p> <p>① 제10차 헌법 개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헌법 개정을 위해 여성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통로와 공간을 마련 - 개헌 논의 시 만들어질 모든 공적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 확보 - 제10차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국가의 성평등 실현의 의무' 명시 -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성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 - 법률은 선출직·임명직·공직 진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동등하게 보장 <p>②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으로 확대 			

③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④ 공천 시 여남 동수 의무화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을 위해 공천 시 여남 동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제도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회수

⑤ 성비위 정치인 활동 제한

- 성범죄 및 2차 가해 이력 심사 가능한 정당 시스템 마련하도록 「정당법」 개정

⑥ 「정치자금법」 개정

- 여성 후보 비율 30% 미달 시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하는 규정 도입
- 원내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현실화를 위한 지급기준 전면 재검토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여성의당		
제 목	내 몸에 남의 동의 필요 없는 나라	분 야*	보건복지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발병원인 및 예후, 유병률, 치료방식 등이 다른 질병들이 많음에도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개발, 승인된) 약물 부작용 등의 문제 역시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계 약품 성별평가 의무화 및 여성질병의 비급여 비율을 낮추며 국민 건강검진 성별 차등화 삭제 - 무분별한 보호자 동의 관행 폐지 및 보호자 범위 확대하여 여성 1인가구 건강권, 생명권 사각지대 해소 -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폐지하여 기혼여성의 임신중지권 확보 -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과 임신 32주 이내 임신중절 허용하는 법안 신설 - 의사들의 집단이탈 시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불법진료행위 지시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과 불법진료행위 지시 철폐를 위한 법 제정 <p>○ 이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규의약품 및 치료기술 심사승인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부작용 데이터 포함 의무화하고, 보조생식술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관련 법제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월경 용품 및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의 안전성 및 성별에 따른 영향 조사 의무화 - 국민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검사 대상을 여성, 남성 모두 24세부터로 정책 개선하고 유방초음파 검사 등 여성질병 검사항목 급여 적용 ② 의료법 제15조에 시행령 신설하여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사정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4조의2의 '법정대리인'을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개정. ③ 안전하고 완전한 임신중지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마련 			

-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임신중지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임신중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와 안전한 의료기관 정보 및 임신중지시술 의료체계구성/의학적 사유 외의 경제, 사회적 사유로도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청소년 및 취약계층 여성 (장애 여성 등)이 임신 중단을 원할 경우 병원 정보 등 지원을 제공하며 임신 중단을 위한 의약품(미프진) 판매허용.

④ 간호법 제정안 추진

-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검사(검체 채취, 천자),관련 기록 작성 튜브관리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권 마련/간호사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또는 법과 어긋나는 지침을 거부할 시 법적보호 및 관련제도 마련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임신중지가 필요한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여성의당		
제 목	여성가족부 위상 강화, 성범죄자는 나라 일 못하는 나라	분	야* 행정자치
<p>○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위상 재정립, 성평등 정책 평가를 위한 성주류화 제도 확대 <p>여성가족부 위상 재정립,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고 정책효과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주류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의 삭감, 여성가족부의 불안정한 지위로 성주류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서 반복 발생하는 성비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와 이미지 회복, 공공부문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 <p>2023년 기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사건은 2524건이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사건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 반복되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마련이 필수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 및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강화 <p>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문제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후퇴시킴. 특히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성비위 전력이 있는 자의 공직 진출에 제한을 두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여성관리직 비율 개선 <p>2020년 기준 공공부문 중앙정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8.5%로 OECD 회원국 평균비율 37.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진출이 저조함</p>			
<p>○ 이행방법</p> <p>① 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p> <p>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권익 증진 분야 인력 충원, 성차별 시정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성주류화 정책이 전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 			

- ② 공공기관 성비위 관련 신고 해태시 기관장 처벌 명확화
 - ③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여성관리직 비율 반영
 - ④ 국가공무원법 상 성비위 관련 징계 규정 강화
 - ⑤ 공공기관 내 인사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확보, 공직후보자 검증시 성비위, 2차 가해 이력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이행기간
- 22대 국회 임기인 2028년까지
- 재원조달방안
-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 지속적인 확대 편성